

보도시점 2026. 7. 20.(월) 14:00
2026. 7. 21.(화) 조간

배포 2026. 7. 20.(월) 09:00

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 송미령 장관,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장 방문(합천군)
-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 ①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 반려동물 동반 숙박·위케이션 공간 조성 등), ②농촌마을보호지구(노후 계사 철거 후 마을 힐링 숲 조성)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

*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첫째,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어 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법」)·스마트농업육성지구(「스마트농업육성법」)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 및 기본방향, 구체적인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은 현재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①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②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농촌마을보호지구(소매점, 목욕장, 세탁소 등), 농촌산업지구(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등), 농촌융복합산업지구(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축산지구(기숙사, 동물병원, 가축시설 등) 등

③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구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가 실질적인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셋째, 농촌특화지구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

* 농촌마을보호지구(충남 금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경관농업지구(전북 고창 청보리밭), 농업유산지구(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전북 임실치즈마을)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이 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 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남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복옥규 (044-201-1559)
		담당자	사무관	왕수인 (044-201-1558)

1 농촌마을보호지구

[충남 금산]

- 군북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일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할 계획
-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산화질소 등이 아토피 환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등 정비



[충남 홍성]

- 홍성군 고미당 마을(2020년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 사업으로 선정)
- 쉼터·공공 화단 조성, 빈집 정비, 기반시설 개선 등 마을 주민들이 개선에 직접 참여
- 전문가·행정·디자인센터가 참여하여 주민 역량을 보완하고 지방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신뢰 확보



2 농촌산업지구

[경북 영덕]

- 주거지와 혼재된 수산물 가공공장을 인근 특화농공단지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주민 생활공간으로 재생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센터, 스마트 수산가공단지를 연계한 수산식품 산업클러스터를 농촌산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산업거점으로 육성



[강원 인제]

- 조성 예정인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농촌산업지구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산 연관 산업의 유입 기반을 마련 * 조성면적 21ha
- 북면 원통리 내 마을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시설을 농촌산업지구로 이전·집적화하고, 국방 관련 산업과 군납 유통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 지원



3 축산지구

[경남 고성]

- 마을 내 돈사를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전, 가축분뇨처리 시설, 마을 내 주차장·정원·운동시설 등 조성 중
- '공간정비사업',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연계
* 조성면적 8.7ha, 양돈 축사 10개동, 돼지 32,000두 사육 계획



[전북 장수]

- 한우지방공사를 중심으로 인근 축사를 이전하여 주변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축사 관리 도모
- 스마트 축사 조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마트 축산 후계 인력 양성
- * 임대형 축산단지 6,400㎡, 장수한우사관학교 조성 5,400㎡, 이전축사 집적화단지 13,000㎡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전북 임실]

- '18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임실(치즈) 선정
- 가공생산시설 확장,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등 인프라구축, 숙성치즈 콘텐츠 개발, 임실N치즈유통센터 활성화 등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저지중 젖소 등 특화 축종의 계획적 육성 등 축산지구와 연계하거나, 축산 부산물의 에너지 활용을 통한 재생 에너지지구와 연계 가능



[강원 횡성]

- 안흥면에서 생산되는 국산팔(연 100톤)이 지역의 특산품인 안흥찐빵 제조 외에도 전량 가공원료로 활용되도록 창업 인큐베이팅센터(교육, 가공 및 저장) 조성, 팔 활용 추가 콘텐츠 개발 촉진·보급 * 조성면적 30ha
- *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활용



5 재생에너지지구

[경기 여주]

-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전국 최초의 1MW 마을 공동체 발전소)
- 마을 공동소유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발전시설 설치
-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매달 약 1000만원의 순수익을 마을식당, 행복버스 등 공동체 복지로 활용



[충남 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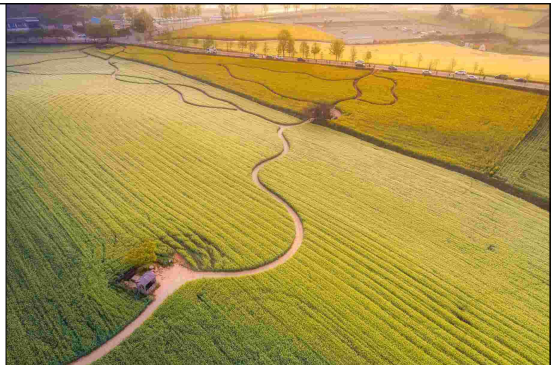
- 결성면 원천에너지전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를 중심으로 바이오가스·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계획적으로 집적화 * 조성면적 24ha
- 인접한 은하 축산지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경축순환 체계(축산-에너지 연계) 확립



6 경관농업지구

[전북 고창]

- 공음면 일원의 청보리 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보리 가공시설·축제·관광·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지구로 육성
- 고창청보리잡곡영농조합법인 및 청보리한우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되어 있음 * 조성면적 약 77ha



[전남 신안]

- 경관보전직불 대상지인 유채재배지를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이와 연계한 유채유 가공·체험 농장 등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지구 육성 * 조성면적 80ha(경관), 60ha(융복합)
- *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활용



7 농업유산지구

[전남 완도]

-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인 청산도 구들장 논
- 16~17세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최소 250년에서 최대 400년의 역사
- 고유한 농업기술 및 기법,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농요, 특별한 경관 등 보호해야 할 전통 농업문화 보유



[경북 상주]

-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전통 곶감농업(19년 지정)을 고려 하여, '상주동시' 품종보존 및 감 재배/관리/가공에 대한 농업 유산적 가치 보호 필요
- * 국가중요농업유산 면적 1,255ha



8 특성화농업지구

[충남 홍성]

- 장곡면·홍동면 일원 대규모 연접 우량농지를 특성화 농업지구로 지정하여 저탄소·친환경 유기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보호 *조성면적 (장곡)68ha (홍동)233ha
- AI 스마트 육묘장·AI 친환경 시설재배농장 조성 및 유기농 빅데이터 시범 구축 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계획



[전북 김제]

- 생산량*에 비해 불충분한 지역 내 가공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판로 확보에 한계
- * 콩 재배면적 7,200ha(전국 최대 주산지)
-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시범단지 조성 및 다양한 논콩 가공시설 건립 계획
-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계획

